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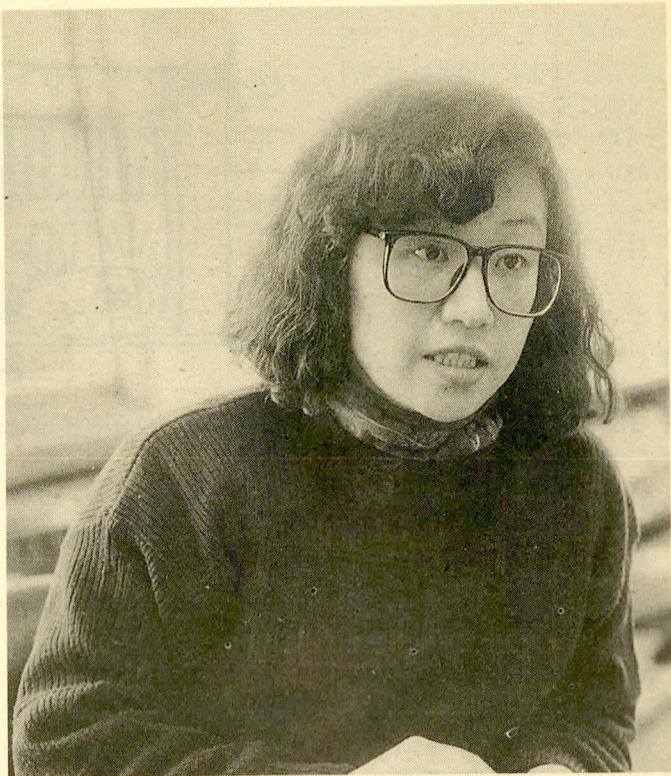
“저소득층 자녀 위한 예산 마련돼야 합니다”

민간탁아운동 이끄는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최현숙 신임회장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탁아소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탁아요구 집단인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탁아비 지원문제가 남아 있어 지원대상 현실화를 최대 현안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탁아문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인만큼 정부정책을 통한 탁아행정의 바른 정착과 새로운 양육문화의 형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간 달동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보면서 민간탁아운동을 이끌어 온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최현숙(35) 신임회장은 ‘탁아지원대상의 현실화’를 가장 큰 숙제로 꼽는다. 감리교 신학대를 졸업한뒤 교회활동을 하다가 88년부터 구로놀이방을 운영, 탁아문제의 절박함을 접했던 그는 민간탁아소의 정착 없이는 탁아의 진정한 해결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탁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국공립탁아소가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국공립탁아소만큼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과 확충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법적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의료부조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은 수적으로 극히 미미하고 실질적 탁아요구집단이 아니라는 점이 꼭 지적돼야 합니다. 국공립탁아소에 대한 지원비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침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법개정운동과 맞물려 있는 지원요구 싸움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탁아행정이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민간탁아소의 영리화를 막는 유일한 길은 적은 탁아지원예산이나마 조금씩 골고루 나눠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탁아소운영비의 80%가 인건비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무런 지원책을 보장받지 못한 민간탁아소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고시될 보육 단가가 1인당 10~15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공립은 부모로부터 4만원

정도의 보육비를 받고 나머지는 국가 보조로 운영할 수 있지만 민간탁아소의 경우는 집값 상승 등 각종 물가고로 고시단가인 15만원으로도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소득층 자녀를 돌보는 민간탁아소가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비는 5만원에 불과해요.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보육비로는 형편없는 수준의 밥값과 간식비, 최소한의 교육자료비밖에 할 수 없어요. 결국 교사 인건비나 집값은 어렵게 후원받거나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해 나가는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민간탁아소는 문을 닫게 돼요.”

이렇듯 민간탁아소의 존폐문제라는 위기에 처한 그는 요즘도 탁아관계자들과 접촉,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별토론회를 열고 있다. 그 결과 10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탁아소 역시 엄청난 운영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다.

“가정탁아의 경우 법적 고시 단가대로 받아서 운영한다 해봅시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1명의 교사가 몇십명을 돌보는 결과를 초래해 탁아의 엄청난 질적저하를 가져오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국공립이 아직 시작단계에 제자리를 찾지 못한 시점에서 민간탁아소의 정착을 통한 정부의 견제나 탁아소의 공기능 담보는 탁아의 확실성을 막고 다양한 양육방법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국공립 탁아소의 확충과 함께 민간탁아소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는 그는 작년 구로놀이방을 운영하면서 민간탁아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관료적 탁아정책의 모순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의료부조자 자녀대상의 민간지원금으로 각 구청에 3천9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대개 줄 대상이 없어 3년씩 썩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로구청에 지원요청을 했더니 법적 근거가 없어 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구로의 경우 똑같은 대상아동을 놓고 새마을 유아원에는 국공립이라는 이유로 18억씩 지원되

고 민간탁아소라해서 단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전시행정은 큰 잘못입니다. 또 구로에는 25~30세의 근로여성이 7만명에 달해 잠정적 탁아요구집단이 4천명으로 잡고 새마을유아원에 수용가능하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항시적 대기자가 20명씩 밀려있는 실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탁아요구대상의 조사와 이에 맞는 예산의 확보, 고른 분배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지자체가 처음 실시된 작년 탁아문제를

들고 뛰면서 여야 관계 없이 많은 시나 구의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여준 것을 ‘큰성과’로 받아들인다. 아직 관의 위아래가 서로 재량권이 없다면서 책임전가를 하고 있고 관의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정부 설득작업을 성실하게 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요즘 국민학교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탁아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지탁연을 저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간탁아운동의 핵심체로 만들면서 장기적인 탁아법 개정운동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박혜숙 기자>